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 지 호**·황 아 란***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질’을 비롯한 다른 경쟁변인들이 어떻게 복지태도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복지수준 인식을 연계한 복지태도의 다면적인 성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모두 복지태도의 공통적인 결정요인은 국가 부패로, 국가 주요기관과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국가경제와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복지태도가 달라지는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의 부가적 발견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학력과 도시규모, 자산과 같은 개인의 인구사회적 배경이 복지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학력이 높을수록, 도시화된 곳에 거주할수록, 자산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으면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인식을 하지만 저학력층에서는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모순된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또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해도 농촌에 거주하거나, 자산이 많을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각각 기존의 공동체 가설과 자기이해 가설을 지지해 준다.

주제어: 복지태도, 복지수준, 정부의 질, 부패, 정의, 국가 능력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5205).

** 제 1저자,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전임연구원(jiholeeb@sogang.ac.kr).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공공정책학부 교수(ahwang@pusan.ac.kr).

1. 서론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는 현대 국가에 나타난 공통된 현상이며, 최근 우리나라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복지를 더 많이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세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갖는다.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선거기제는 정치인과 정당이 국민의 다수 의견을 좇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금 복지지출을 늘리게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만큼 세금을 늘리지는 못하게 하는 딜레마에 봉착한다. 즉,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는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불가피하게 겪게 되는 복지수요의 증가와 재정 압박을 잘 조절하여 적재적소의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전달한다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것이고, 그러한 정부를 ‘좋은 정부’라고 인식할 것이다. 복지수요 증가라는 정책 환경에서 이를 잘 조정해 가야하는 것이 최근 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지출에 대한 태도 연구는 그 만큼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복지분야 정부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어 왔다. 초기 연구들은 계급·계층의 이해와 같은 개인의 자기 이익과 신념체계가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복지정책의 중요도, 복지수혜의 경험, 수혜자에 대한 인식, 복지 만족도 등 복지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제도가 태도를 결정한다는 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연유하는데, 복지제도의 경험으로 형성되는 인식이 복지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Kumlin, 2002; Svallfors, 2002). 제도주의적 접근은 복지제도의 어떤 면이 친복지적인 혹은 반복지적인 태도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연구의 실천적 의의를 높여준다. 예컨대, 복지수혜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복지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는 국민들 사이에서 반복지적 태도를 줄이기 위해 복지수혜자의 기만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양한 복지인식 중 이 연구가 복지태도에 대한 설명변수로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의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괄목할 만큼 확대되었다. 경제위기, 빈부격차의 심화와 급속한 노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이 국민의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증대시켜 왔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는 절대 빈곤층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빈곤층, 노인과 영유아 등으로 점점 보편화되고 다양화되었다. 복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 국민 사이에서는 정부가 수행해 온 복지에 대한 평가 인식이 형성된다.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아직 낮다든지 아니면 이만하면 높다든지 하는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황아란·이지호, 2015)는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복지수요가 달라진다는 가설을 확인하였는데, 복지수준을 낮게(높게) 인식할수록 복지수요가 증가(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사이에는 반대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능력이 없다고 인식하면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면, 정부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충분히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해도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고, 복지수준이 높아도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일면 모순적인 상충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함께 본 연구는 정부능력 등 복지태도와 관련한 변인들이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복지확대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에 대한 인식이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복지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이하 '복지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사회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성향과 정부인식의 영향을 통제한 가운데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다. 그런 다음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사람과 높게 인식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이들의 복지태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가 교차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태도뿐 아니라 상충적인 태도에 대한 체계적으로 이해를 제공할 것이며,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지출 태도를 결정하는 변인들 간의 조절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복지태도에 대한 초기 연구는 복지 정치에서의 계급균열을 강조하였다. 코피(Korpi, 1989)와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 1990)의 연구에 이어지는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계급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나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나아가 계급 간 복지국가의 지지의 차이는 복지레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Edlund, 1999; Svallfors, 1997; 2004).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복지인식은 서구 국가에서 나타난 복지인식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계급이나 계층적 차이, 혹은 소득과 고용상의 지위별 차이와 한국인의 복지태도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김영순·여유진, 2011; 이성균, 2002). 그에 대해 김영순·여유진(2011: 15)은 복지 체험의 부족과 약한 노동시장제도, 좌파정당의 결여와 같은 제도적 미발달이 복지인식의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을 가져왔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인들의 복지태도에는 계층 대신 이념성향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란, 1995; 안치민, 1995). 보수성향의 사람들이 반복지적인 태도를 가지고 진보성향의 사람들이 친복지적인 태

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계층적으로는 차이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념과는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서구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복지태도가 계층적 이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층적 이해가 집약되는 이념과도 연관성을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성향을 분석 모형에 포함시키면, 계층과 복지태도와의 관계가 사라지는 경우가 나타났던 것이다(Papadakis, 1993; Bean & Papadakis, 1998).

이에 대해 황아란·이지호(2015)는 정당선호를 포함시킨 분석모형에서 복지태도에 대한 이념성향의 영향이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태도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의 정책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계층적 이해가 복지태도에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데도 이념성향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이념성향이 정당선택으로부터 형성되고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는 경로구조를 갖는다는 해석이다.

복지태도 연구의 다른 하나의 흐름은 계급·계층적 이해관계로부터 복지제도의 운영을 통해 형성된 이해관계로 관심을 옮겨왔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가 노동과 자본의 계급적 축을 둘러싸고 나뉘지기보다는 비용과 수혜의 세 가지 차원 - 복지수급자, 복지납세자, 복지서비스제공자 - 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Andress & Heien, 2001; 안상훈, 2000, 2009). 비슷한 맥락에서 복지 수요 혹은 복지 서비스의 수혜 경험이 계급·계층보다 복지태도를 더 잘 설명한다거나(주은선·백정미, 2007), 복지수급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긍정·부정 태도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서복경·황아란, 2012).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정부의 복지 수행에 대한 공중의 평가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20여년 간 복지제도를 급속하게 확충시킨 만큼, 국민들은 지금까지 실시된 복지정책의 성과나 복지 상태에 대한 평가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의료, 노인, 빈곤 등 개별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전반적인 복지 상태에 대해서도 수준이 높든지 낮다는 인식을 갖는다. 복지정책에 대한 수행 평가나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은 국가가 이루어놓은 객관적인 복지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다. 이들은 복지수혜의 경험, 납세의 정도, 그리고 복지서비스직 취업 유무 등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이익동기와 다르다.

최근 들어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에 대한 공중의 인식에 주목한 것을 볼 수 있다. 서복경·황아란(2012)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다양한 관련 변수들을 포함시킨 모형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의 비용부담의사에 기초단체장에 대한 신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정책집행자에 대한 신뢰가 복지태도에 뚜렷한 영향력 미친다는 것이다. 이현우(2013)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공무원의 신뢰를 통해 측정한 ‘정부의 질’이 한국인의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검증하였다. 공무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고 믿을수록 복지확대에 더 우호적이었다.

정부신뢰가 복지지출 태도의 주요한 설명요인이라는 주장은 ‘정부의 질’이 복지국가에 긍정적인 상

관관계를 가진다는 일련의 ‘정부의 질’ 연구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다. 국가 간 복지의 범위와 크기의 다양함이 계급동원의 차이로부터 나온다는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 theory)에 대하여, 로스타인(Rothstein et al., 2011)은 복지국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제도의 중요성을 제기하였다. 실질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 무임승차의 정도와 같은 정부 수행의 질이 공중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이라는 것이다(Rothstein et al., 2011: 10). 이러한 이론은 계급균열이 지배적인 국가에 한정해서 적용될 수 있는 권력자원론과 달리, 대부분의 나라에 적용될 수 있고 복지태도에 대한 국가 간 비교연구를 발전시켰다.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의 제도가 투명하고, 공정하며,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의 충원구조 또한 능력 본위로 이루어지는 나라일수록 국민의 정부신뢰도가 높고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연구는 종속변수인 정부의 복지노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GDP에 대한 복지지출 비율을 알려주는 ‘사회지출 자료(Social Expenditure Database)’와 실업과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에 참여하는 자격과 인구 비율로 만들어진 ‘편익 지표(Benefit Generosity Index)’를 사용하였다. 한편, 독립변수인 ‘정부의 질’ 측정자료는 부패와 법질서, 그리고 관료의 질에 대한 전문가 인식에 기초한 ‘국가위험지표(Country Risk Guide indicators)’를 사용하였다(Rothstein et al., 2011: 12-13). 즉 집합자료로 측정된 국가의 복지지출 노력과 전문가 설문에 기초한 ‘정부의 질’의 연관성을 본 것이다. 이러한 자료에 기초한 국가 간 비교연구는 ‘정부의 질’과 정부의 복지노력의 보편적 관계를 도출하려고 의도하였지만, 비교연구에서 나타난 관계가 한 국가의 일반 국민들 사이에 나타나는 복지태도와 정부인식의 관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두 변수 사이에는 그 국가의 특수한 문화적인 배경이나 상황적인 변수가 매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계층적 이해와 정치성향, 복지수행에 따른 평가 인식, 그리고 ‘정부의 질’과 관련된 변수들이 공중의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효과를 갖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이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복지확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관심은 복지수요를 야기하는 국면에 대한 이해로부터 왔다.

[표 1]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실시한 ‘2015년 정치인식조사’에서 나타난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확대 태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 현재보다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은 80.8%를 차지하였다. 이들 중 복지확대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9.2%에 불과했다. 그러나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가운데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48.3%로 늘었다. 국가의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면 복지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태도다. 그러나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에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51.7%에 달했다. 복지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서도 복지확대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23.8%를 차지한 것이다. [표-1]에 의

하면, 응답자의 66%가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면 복지확대에 찬성하고,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면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나머지 34%의 복지태도다. 그들은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해도 복지 확대에 찬성하거나(23.8%),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해도 복지 확대에 반대하는(10.3%) 상충적인 태도를 가진다. 그러면 국민의 1/3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태도는 어떤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가?

[표 1]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

		현재보다 복지 확대		전체	통계량
		찬성	반대		
복지수준 인식	낮다	658명 80.8(43.6)	157명 19.2(10.3)	815명 100.0(54.0)	$\chi^2=144.11$ $p<.001$
	높다	359명 51.7(23.8)	336명 48.3(22.3)	695명 100.0(46.0)	
전체		1017명 (67.4)	493 (32.6)	1510명 100.0	

주: 괄호안의 수치는 전체 국민(1510명)에 대한 비율임.

자료: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15년 정치인식조사.

보레와 골드스미스(Borre & Goldsmith, 1995: 13)에 의하면, 특정 영역의 정부행동에 대한 수요는 정부가 그 영역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별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생긴다. 이에 따르면, 복지수요는 정부가 복지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발생하고, 반대로 정부가 능력만큼 복지수준을 끌어올렸다면 복지수요는 줄어든다. 즉, 정부가 잘 하면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따라서 복지확대를 자제하려는 태도가 발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지수준이 낮아져서 복지확대에 동조하는 태도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정부 인식과 복지확대 태도 사이에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이 놓여 있는 것이다.

복지태도와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는 정부 인식으로는 특혜와 비리 등 부패와 정의 같은 ‘정부의 질’과 관련한 인식이다.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이 매개되면 ‘정부의 질’이 복지확대에 양의 방향에서 연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면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복지확대의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정부의 질이 높으면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되어 복지지출을 자제하려는 태도가 확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질’ 인식 중 ‘국가 과제를 해결할 가능성(정부 능력)’이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에 매개되면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사이에 다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정부가 능력이 없다고 인식하면 정부가 복지수준을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복지확대를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정부가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면 정부가 복지수준을 높여 왔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해도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 있고, 복지수준이 높아도 복지확대에

호의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의 질’ 변인들이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분석을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것이다. 첫째,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관련 변수들을 포함하여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치성향 변수를 통제한 가운데 복지인식과 경제사정 인식, 그리고 ‘정부의 질’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증할 것이다. 둘째,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을 나누어서 복지지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규명할 것이다. 이는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사람과 높게 인식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함이다. 이러한 분석은 복지수준 인식과 복지지출 태도를 결정하는 변인들 간의 조절 효과에 대한 지식과 다수의 일반적인 복지태도와 상반되는 태도를 지니는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1) 변수 설정

[표 2]는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를 요약하고 있다. 종속변수는 정부의 복지지출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면 1, 동의하지 않으면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크게 복지인식, 정부의 질, 정치성향, 경제사정 인식, 인구사회학적 배경 등 5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표 2] 분석 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범주	독립변수
복지지출 확대 (반대=0, 찬성=1)	복지인식	복지 수준의 낮고 높음(1점~4점)
		복지전달의 적절성(1점~4점)
	정부의 질	과제해결 능력의 유무(1, 0)
		청렴성(0점~10점)
		공정성(1점~4점)
	정치성향	이념성향(0점~10점 연속변수)
		새누리당 지지(더미 변수)
		새정치민주연합 지지(더미 변수)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도(0점~10점 연속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의 범주	독립변수
	경제 인식	국가 경제사정(1점~4점)
		개인 경제사정(1점~4점)
	인구사회학적 배경	남자(1, 0)
		연령(만 나이)
		학력(1점~5점)
		거주지 도시규모(1점~3점)
		가구 자산(1점~10점)
		주관적 계층인식(1점~3점)

(1) 복지인식

복지인식에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였다.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은 복지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지출 태도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해야 복지수요가 발생하고 따라서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복지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복지전달에 대한 평가는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방향이 반대일 수 있다. 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은 정부의 복지정책 집행에 관한 주제다. 따라서 복지지원의 전달 평가가 좋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된다.

(2) '정부의 질' 인식

기존 연구에서 정부인식에 대한 변수는 주로 정부신뢰를 사용하였다(서복경·황아란, 2012; 황아란·이지호, 2015). 정부신뢰는 정부가 운영되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 제도주의적 시각에 따르면 제도에 대한 신뢰는 국가정책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Steinmo, 1994).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라는 추상적 변수 대신에 '정부의 질' 개념을 구성하는 보다 구체적인 요소들을 정부인식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동안 국제기구들은 다차원적 모델을 상정하고 정부의 질을 측정해 왔다. 대표적으로 세계은행은 1995년부터 세계 각국의 거버넌스의 질을 민주적 책임성, 정치적 안정,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 통제라는 6개 차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해 왔다. '정부의 질'을 학문적 관심으로 떠오르게 한 퍼트남(1993)은 현대 사회에서 좋은 정부의 속성을 반응성(responsiveness)과 효과성(effectiveness)으로 규정하고, 정책과정, 정책공표 및 정책실행의 과정에서 이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이탈리아의 20개 지방정부의 질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러나 퍼트남 이후 정부의 질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

행해 온 로스타인과 그의 동료들(QoG Institute workingpapers 참조)은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좋은 정부의 핵심 속성으로 정의하고, 세계 각국의 정부의 질을 측정하였다. 로스타인(Rothstein, 2011: 13)은 이스턴(Easton)의 정치체제 모형에서 투입 부문(input side)을 민주주의 정치과정으로 간주하고, 정부의 질을 산출 부문(output side)에서의 관료의 통치 행위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불편부당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질은 교육, 의료 및 치안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기관들이 모든 시민을 공평하게 대응하는 수준, 그리고 기관들의 반부패 청렴도의 3가지 차원에서 측정되었다(Charron et al., 2015; Holmberg & Rothstein, 2014).

피트남과 로스타인의 연구 성과를 한국에 적용하면서 국내의 정부의 질 연구 또한 한국인의 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국가 기관의 공정성, 정부정책의 불편부당성, 공직사회의 정직성을 제시하였고(박종민·김왕식, 2006),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정책과정의 절차 공정성과 정책결과의 분배 공정성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박종민·배종현, 2011). 한편 최상욱(2012)는 정부의 질 논의가 절차적 공정성에 한정되어 측정지표의 종합성과 확장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질 요인 중에 하나인 효과성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정부 역량(government capacity)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정부의 질에 대한 그간의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발견을 집약하면, 정책 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정책 결과로서의 분배의 공정성, 그리고 정책 산출로서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정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질 인식의 변수로 이 연구는 정부 능력, 부패·청렴도, 그리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설정하였다. 첫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 즉 정부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질이 높다고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의 과제해결 능력을 ‘정부의 질’의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정부의 과제해결 능력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지출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부패 또는 청렴도는 정부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속성이다. 이 분석에서는 8개 주요 국가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부패·청렴도 평가의 산술평균값을 청렴성 지표로 조작화하였다.¹⁾ 기존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정부가 청렴(부패)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의 복지확대에 긍정(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셋째, 공정성은 정부의 질 연구에 따르면 정책 집행의 절차적 공정성을 의미하는데(Rothstein, 2008), 공무원의 불편부당한 충원제도와 정책 집행, 그리고 법 집행에 대한 시민의 감시 정도 등이 공정성의 측정자로 거론된다. 그러나 복지확대 태도에는 그러한 절차적 공정성보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분배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복지확대는 결과의 불공정성을 교정하는데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분석에서는 ‘정부가 법을 집행할 때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에

1) 법원, 중앙부처, 국회, 중앙부처 공무원, 지방공무원, 검찰, 경찰, 국세청/세무서 등 8개 국가기관 부패청렴도의 크롬바흐 α 는 0.928로 8개의 변수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었다.

관대하다는 의견에 대한 태도로 조작화하였다. 정부가 돈과 권력에 관용적일수록 복지 수준은 낮아지고 따라서 복지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3) 정치 성향

복지 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정치이념을 정치성향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념 가설은 복지태도가 개인과 국가의 적절한 관계를 고려하는 가치체계에 뿌리내려져 있다고 가정한다. 보수는 빈부가 개인의 책임이므로 가난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하려는 복지국가 정책에 반대하고, 진보는 개인의 빈부가 경제적 불평등 구조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진보적 이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정부의 복지지출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고 보수적일수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보수·진보가 ‘친복지 대 반복지’ 차원에서 형성되기보다 대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의 차원에서 형성되어 온 만큼(강원택, 2003; 김무경·이갑윤, 2005; 이현출, 2005; 이내영, 2009; 이갑윤, 2011; 류재성, 2013), 이념이 복지태도와 정부역할 인식과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정당 선호 또한 복지태도에 대한 설명변수로 분석에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정책에 대한 선호태도가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통해 형성되기보다는 정치인이나 정당의 정책선호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이갑윤, 2011). 예컨대, 호남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해 ‘햇볕 정책’을 더 지지하였던 이유가 그들의 사회경제적 이해나 이념 성향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 전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정책으로 햇볕 정책을 제기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복지 정책에 대한 선호도 개인의 경제적 처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이 복지 정책을 강조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민주당 계열정당의 친복지정책에 대해 대중영합주의라고 비판하면서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따라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복지확대에 더 부정적인 것이고, 민주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복지확대에 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현직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정부 인식에 대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에는 통상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부의 질에 대한 국민 인식은 정부의 공정성, 청렴성, 능력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는데,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인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현직 대통령 지지도를 통제함으로써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독립적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4) 경제사정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은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대한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경제 가설은 경제적 긴장과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고용률이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에는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Blekesaune, 2007). 그러나 국가 경제가 나빠지면 사람들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복지확대를 더 원한다는 가설은 복지국가 전통이 있는 국가에 적실한 가설일 수 있다. 복지국가체제에서 국민들은 정부가 경제가 풍요로울 때 축적한 부를 경제가 어려울 때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정부 복지의 확대를 어렵지 않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은 이러한 사고를 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 재정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복지와 같은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약하다면, 경제가 어려울 때 국가가 국민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 있다.

개인의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은 그 반대일 것이다. 자기이해 가설(self-interest argument)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과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복지국가체제를 지지하는 태도를 가질 것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복지혜택을 덜 받는 사람들은 정부의 복지확대에 부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한다(Hasenfeld & Rafferty, 1989). 자신의 경제사정이 나쁘면 정부의 복지지출을 지지하고, 여유가 있으면 복지지출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사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반대의 가설도 성립할 수 있다. 개인이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면 자신의 이익에 몰두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는 것인데(Alt, 1979; Durr, 1993),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복지는 자신이 내는 세금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소모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5)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개인의 배경변수로는 성, 연령, 학력, 거주지 유형, 자산, 주관적 계층 등을 포함하였다. 복지정책평가 연구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수는 개인의 정책수요를 형성시키는 객관적 조건을 진단할 수 있게 하며,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지태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는데 사용된다. 먼저 성별은 서구의 복지인식 연구에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변수로 취급되어 왔으며(Svallfors, 1999),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도 통제변수로 활용되었다(안상훈, 2000; 주은선·백정미, 2007). 여성이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에 의해 사적인 돌봄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또 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상당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남성보다 복지분야 정부역할 확대에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사회화 이론 또한 복지인식에 대해 여성이 특별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이유를 설명한다. 여성은 사회화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남성보다 많이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배분과 복지정책에 동의하는 인성이 발달했다는 것이다(Scott et al., 2001)

연령은 복지인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반된 가설이 제시되어 왔다. 젊을수록 복지국가로부터 받

는 혜택이 커서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가 높다는 주장(Hansenfeld & Rafferty, 1989)과 고령층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복지의존이 높다는 의견(Blekesaune & Quadagno, 2003)으로 양분된다. 한국의 경우도 두 가지 가설이 모두 유용할 수 있다. 최근 청년 실업과 빈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젊은 층의 복지의존성이 높다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청년들의 복지를 부모의 경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자식들의 복지에 자산을 소모한 노년층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복지에 대한 정부의존성이 높을 수도 있다.

교육수준 또한 복지태도 및 인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변수다. 학력이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화 이론의 주된 논거는 사람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습득하고 내면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Andress & Heien, 2001). 교육은 복지의식을 높이기 때문에 고학력층이 저학력층보다 복지확대에 대해 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성장의 가치가 지배적인 나라에서 교육은 복지국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거주지의 도시 규모도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특히 연령이나 자산, 계층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발견된다면 문화적 가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원자화된 개인주의적인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개인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맡기려는 경향이 강할 수 있는 반면에 농촌 거주자들은 마을 혹은 이웃 공동체의식이 강해서 복지에 대한 정부 의존성이 오히려 약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복지태도에 대한 계층의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복지태도가 경제적인 처지에 따라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구는 소득과 달리 개인의 자산이나 주택 소유 여부가 계층의식이나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이갑운 외 2014). 최근 사회적으로 ‘금수저-흙수저’ 라는 비아냥이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의 계층의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자산의 유무 및 그 정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계층과 관련하여 주관적 계층인식과 가구 자산을 포함하였다.

2) 조사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2015년 정치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국가인식, 정부인식, 정책인식, 체제인식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치인식조사로서 각 영역마다 다양한 설문으로 구성되었는데, 특히 정책영역에는 이 연구가 관심을 갖는 복지인식의 다양한 측면들이 포함되었다. 표본은 16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비례할당을 한 후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구성되었다. 표본 크기는 1511명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2.5\%p$ 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15년 10월 28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개별면접으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태도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삼아 [표

2)에 제시된 독립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²⁾ 참고로 회귀모형의 구축을 위한 기초분석으로 5개 범주의 관련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과 분산분산을 실시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변수들을 걸러내고, 이들 변수들 사이에 상관성이 높아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는 변수들을 제외하였다.³⁾

4. 분석 결과

1) 복지수준 인식과 복지지출 태도의 연관성

[표 3]은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 여부(반대=0, 찬성=1)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다.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서비스의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에 커다란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수준은 확률비가 0.27로 모형에 포함된 변수 중 복지태도에 가장 영향이 큰 변수다. 즉 복지수준을 높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지출에 찬성할 확률은 약 3.7배만큼씩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복지지출 확대 여부의 결정요인(전체 모형)

구분	변수명	로짓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상수항	3.56	0.69	35.30
복지인식	복지수준	-1.30***	0.12	0.27
	복지전달	0.26**	0.11	1.30
경제인식	국가경제	0.26**	0.13	1.30
	개인경제	-0.09	0.13	0.92
정부의 질	정부능력	0.29**	0.13	1.34
	청렴성	0.14***	0.05	1.15
	공정성	-0.24***	0.08	0.79
정치성향	이념	-0.01	0.04	0.99
	새누리당지지	-0.24	0.18	0.79
	민주당지지	0.00	0.18	1.00
	국정지지도	-0.09**	0.04	0.92

2) 지면관계상 복지지출 확대태도와 주요 변수 간의 기술 분석은 <부록 1>, 복지수준 인식과 주요 변수 간의 기술 분석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3) 예를 들면, 복지수준 인식과 상관성이 높은 복지영역의 평가, 국정지지도와 상관성이 높은 정부신뢰, 기관부패와 상관성이 높은 공직자 부패, 기관 신뢰 등을 제외하였고, 복지태도와 무관하게 나타나는 지역변수와 소득 등을 생략함으로써 모형의 단순화(parsimony)를 꾀하였다.

구분	변수명	로짓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상수항	3.56	0.69	35.30
개인배경	성	-0.15	0.12	0.86
	나이	0.00	0.01	1.00
	학력	0.04	0.06	1.04
	도시규모	0.24***	0.09	1.27
	자산	-0.05*	0.03	0.95
	주관적 계층	-0.16	0.12	0.85
통계량	N	1454		
	분류정확도	70.3		
	Cox & Snell R ²	0.14		

자료: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15년 정치인식조사.

* p<.1, ** p<.05, *** p<.01

정부의 복지 전달에 대한 평가는 복지수준과 반대 방향에서 복지지출 확대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지확대에 호의적이고, 적절한 복지가 지원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복지 지원’이라는 것이 설문 응답자에게는 더 많고 더 좋은 지원이 아니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효율적인’ 복지를 의미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사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경제 사정에 대한 인식이 양변량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부록 1> 참조), 복지인식 변수와 국정 만족도 등 정치성향 변수를 통제함에 따라 복지확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경제적 상황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의 복지지출에 반대하고, 좋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지출에 찬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경제 사정이 나빠져 고용이 불안해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정부의 복지확대를 원하게 된다는 서구의 가설과 배치된다. 오히려 국가 경제가 나쁘다고 인식하면 정부 재정에 대한 걱정으로 복지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가설을 지지한다. 앞에서 논의했지만, 복지국가의 전통이 없는 나라의 국민들은 개인 복지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하지 못하고, 자신이나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해석된다.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의식이 약하다는 것은 개인 경제 사정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와 무관하다는 분석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정부의 질’과 관련한 변수들은 모두 복지태도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능력,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 만족도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복지확대 태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부의 과제해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람보다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를 찬성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능력이 있다(없다)

고 생각할수록 복지전달이나 관리도 잘 할 수 있다(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확대에 호의적(비호의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렴성은 양변량 분석에서 복지확대 태도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부록 1> 참조), 복지인식과 국정 만족도 등을 통제함에 따라 복지확대 태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관계의 방향은 국가 기관들이 부패하다고 생각할수록 복지확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었다. 정부의 청렴도는 ‘정부의 질’의 주요 속성이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 정부의 정책 집행은 공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정부의 질은 떨어진다. 분석 결과는 정부가 청렴하다고 인식할수록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 호의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셋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정부 능력이나 부패 인식과 반대 방향에서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돈과 권력에 얽매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정부의 복지역할 확대에 찬성하였다. 이는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과 복지태도의 부정적 관계와 유사한 논리구조를 지니는데, 공정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성 개념을 조작화한 변수가 부패인식과 반대 방향에서 복지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분석 결과는 서구의 ‘정부의 질’ 연구에서 설정한 절차적(procedural) 공정성과 다른 실질적(substantial) 혹은 분배적 공정성에 더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절차적 공정성은 법이나 정책 집행에 있어서 불편부당함을 의미하지만, 가진 자에게 기울어진 법 집행을 나타내는 진술은 실질적 공정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Rothstein, 2008), 정부가 가진 자의 편에서 법이나 정책을 집행한다고 인식하면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정치성향 변수 중에서는 현직 대통령 국정 지지도만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과 정당 선호는 양변량 분석에서 복지확대 태도와 연관성이 있었으나(<부록 1> 참조), 다중 회귀분석에서는 그 영향이 사라졌다. 이는 분석모형에 현직 대통령의 국정 만족도를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이념과 정당 선호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와 연관성이 높아서 대통령 지지도가 통제되면 복지태도와의 허위관계가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와 복지확대 태도가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난 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만족할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태도를 가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복지확대를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이후 재정 압박 등으로 인해 복지확대를 자제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가 취하고 있는 복지태도에 동조적으로 되고, 그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자제하려는 그의 태도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일 수 있다.

끝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보면, 성과 연령, 학력은 복지확대 태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복지태도에는 사회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기존 연구에서 자주 발견되었던 것처럼, 주관적 계층인식도 복지태도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 연구와 달리 계층 변수의 하나로 포함한 개인의 자산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1$).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산의 크기가 계층의식을 형성하면서 개인의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구학적 변수에서는 거주지 구분이 복지확대 태도와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거주자일수록 복지 지출 확대에 우호적이고 농촌 거주자일수록 복지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농촌 주민들은 복지를 이웃이나 가족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개인화되어 있는 대도시 주민들이 복지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과 복지에 대한 정부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복지수준 인식별 복지확대 태도의 결정요인

앞의 회귀분석에서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은 복지확대 태도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면 정부의 복지지출에 호의적이지만,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면 정부가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수준의 인식과 복지지출 태도 사이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태도와 상반되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표 1] 참조). 일반적 복지태도와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다음은 복지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과 높게 인식하는 집단을 나누어 복지지출 태도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복지수준 인식과 복지지출 태도를 결정하는 다른 변인들 - 특히 복지수요를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정부 인식 - 간의 조절 효과의 정보를 제공한다.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을 분석모형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표 4]의 두 모형의 설명력은 낮아졌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하나의 변인(청렴성)만이 공통적으로 복지태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이 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해 판이하게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복지수준 인식이 복지수요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먼저 [표 4]의 모형 1은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지태도가 어떤 요인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앞의 회귀분석과는 달리,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부의 복지지원에 대한 평가는 복지태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지태도에 대한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의 효과도 사라졌다.

[표 4] 복지수준별 복지지출 확대 여부의 결정요인

		모형1 (복지수준 낮음)			모형2 (복지수준 높음)		
구분	변수명	로짓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로짓계수	표준오차	확률비
	상수항	2.23	1.05	9.27	-0.78	0.89	0.46
복지인식	복지전달	0.22	0.19	1.25	0.23	0.14	1.26
경제인식	국가경제	-0.13	0.22	0.88	0.35**	0.17	1.42
	개인경제	-0.09	0.22	0.91	-0.01	0.16	0.99
정부의 질	정부능력	0.13	0.22	1.14	0.28*	0.17	1.33
	청렴성	0.16**	0.08	1.17	0.13**	0.06	1.14
	공정성	-0.42***	0.13	0.66	-0.13	0.12	0.88
정치성향	이념	0.01	0.07	1.01	-0.05	0.05	0.96
	새누리당지지	0.12	0.27	1.12	-0.53**	0.26	0.59
	민주당지지	0.32	0.26	1.38	-0.29	0.26	0.75
	국정지지도	-0.20***	0.06	0.82	-0.01	0.05	0.99
개인배경	성	-0.15	0.19	0.86	0.00	0.17	1.00
	나이	0.00	0.01	1.00	0.00	0.01	1.00
	학력	0.20*	0.10	1.22	-0.05	0.08	0.95
	도시규모	0.36**	0.14	1.43	0.16	0.11	1.17
	자산	-0.14***	0.04	0.87	0.00	0.04	1.00
	주관적 계층	-0.16	0.20	0.85	-0.19	0.16	0.83
통계량	N	783			671		
	분류정확도	81.5			58.9		
	Cox & Snell R ²	0.07			0.05		

* p<.1, ** p<.05, *** p<.01

자료: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15년 정치인식조사.

그러나 '정부의 질' 영역에서는 정부의 과제해결 능력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사라졌지만, 국가기관에 대한 청렴성 인식과 실질적 공정성에 관한 인식은 여전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수준이 낮다고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공정성이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의 법 집행이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확률비(0.7)에 의하면, 한 단위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약 1.5배만 큼씩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수준이 낮아서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태도와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태도 사이의 선택에 정부의 청렴성과 정의 인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정부 기관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면 복지확대에

부정적이며, 돈과 권력의 편에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느끼면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인구사회적 배경이 복지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학력, 거주지규모, 그리고 자산이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수준이 낮아서 복지확대에 동조적인 태도와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학력과 거주규모 그리고 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도시 거주자와 고학력층은 복지수준이 낮아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태도를 갖는데 반해, 농촌 거주자와 저학력층은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했다. 자산은 많을수록 복지수준이 낮아도 정부의 복지지출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자산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자기이해의 합리성 가설'이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수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표 4]의 모형 2는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지태도가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준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국가경제 사정과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제가 좋다고 인식할수록 복지지출의 확대에 긍정적이었으며,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도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p < .1$). 또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국정만족도가 복지태도와 연관성이 없다고 나타났지만, 대신 새누리당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나타났다. 즉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중에 새누리당 지지자는 무당파나 군소정당 지지자보다 복지지출의 확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시 말해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파성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복지확대에 대한 찬반 태도는 새누리당 지지 여부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청렴성 인식은 복지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복지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과 달리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이 사라졌지만, 부패 인식이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였는데 이는 그만큼 국가의 청렴도가 복지 확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

5. 결론 및 함의

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또 그에 따른 복지지출의 재정압박이 커지는 현실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복지서비스 공급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등 복지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살피는 한편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이 다른 주요 요인과 어떻게 연계되어 복지태도를 형성하는 지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정부의 질’에 주목한 점이 이 연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데, 복지수준 인식과 복지확대 태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질을 구성하는 주요 속성으로서 정부능력과 청렴성,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일반국민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태도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의 기본모형 분석은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이 복지확대 태도에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복지전달의 평가와 국가경제 사정에 인식이 복지확대에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정부의 질과 관련한 세 가지 변인도 모두 복지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정부능력과 청렴성은 복지확대에 긍정적인 관계를 보인 반면, 법 집행의 공정성은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정부에 대한 인식이 복지 수요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 밖에 정치성향 변수 중에는 대통령 국정 지지도만이,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는 자산과 도시규모만이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기여는 복지수준이 낮으면 복지수요가 늘어난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가설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복지수준 인식이 복지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은 다른 경쟁변수들이 복지수준 인식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복지태도와 연관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흥미롭게 만든다. 복지태도에는 복지수준이 낮아서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수준이 높아도 복지확대에 우호적이고,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핵심 과제는 복지수준 인식과의 관계에서 정부의 질을 비롯한 경쟁 변수들이 어떻게 복지태도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복지수준 인식과 관련한 두 집단이 복지태도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였다.

[표 5] 복지수준 인식별 복지확대 태도의 결정 요인

		현재보다 복지지출 확대	
		반대	찬성
복지수준 인식	낮음	부패 공정 국정지지 저학력 농촌 고자산	청렴 불공정 국정반대 고학력 대도시 저자산
	높음	국가경제나쁨 정부능력없음 새누리당좋음 부패	국가경제좋음 정부능력있음 새누리당싫음 청렴

[표 5]는 복지수준 인식을 연계한 복지태도의 다면적인 성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네 가지 유형의 복지태도를 갖는 집단의 성향을 요약하였다. 복지수준별 복지지출 확대 태도의 분석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복지수준을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과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 간에 복지태도에 대한 결정요인이 확연히 달랐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의 청렴성만이 두 집단 모두의 공통적인 요인일 뿐,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법 집행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정의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복지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국가경제상황과 정부능력에 대한 인식이 복지태도와 연관성을 가졌다. 복지수준이 낮아서 정부의 복지지출이 확대되어야 하거나 복지수준이 낮아도 복지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 결정에는 국가의 청렴도와 정의에 대한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복지수준이 높아서 정부의 복지지출에 반대하거나, 복지수준이 높아도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태도를 결정하는 데는 국가경제에 대한 인식과 정부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복지수준이 높아도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의 약 1/4에 달했다. 이들은 나라의 경제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정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복지수준도 높일 수 있었고, 앞으로도 복지를 확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 반대로 국가 경제 상황이나 정부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경제상황이나 정부 능력에 비추어 복지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복지확대를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의 복지수준도 국가 경제상황이나 정부능력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태도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주는 정책적 함의는 비교적 뚜렷하다.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가 개인적인 배경변인보다 복지인식과 국가경제, 그리고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점은 친복지적인 혹은 반복지적인 태도를 높이고 줄이는 데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 국민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무조건 복지확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의 성과와 정부활동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면적인 복지태도를 지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지수준을 높게, 혹은 낮게 인식하는 두 집단 모두에서 청렴성이 복지태도에 중요한 공통 변인으로 규명된 것은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 복지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가운데 공정성, 거주규모, 자산 등이 규명된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복지태도에 법집행의 불공정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법 집행의 정의실현이 복지수요를 줄이는 데도 중요한 관건임을 시사한다. 거주규모의 영향은 공동체 해체에 기인한 문제일 수 있으며, 따라서 급속히 도시화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복지수요의 팽창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의 공동체 회복에 주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산의 영향도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수요가 높고 복지지원이 필요한 것이 당연하지만 빈부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이 연구는 복지인식을 개별적인 복지정책으로부터 구성하지 않고 전반적인 인식에만 의존한 한계를 지닌다. 개별 복지영역의 지출 태도나 수행 평가를 종합하여 구성한 복지태도 지표나 복지

수행평가 지표가 더 적절하게 복지확대 태도와 복지수준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복지 인식과 복지태도의 보다 나은 측정자를 개발함과 동시에, 이론적 논의로부터 ‘정부의 질’ 개념의 조작화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보다 정교화해서 복지태도와 ‘정부의 질’에 대한 경험 연구를 발전시켜야 할 작업도 향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 강원택(2003). 한국 정치의 이념적 특성: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2(1), 5-30.
- 김무경, 이갑윤(2005). 한국인의 이념경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3(2), 6-23.
- 김영란(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순, 여유진(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 211-240.
- 류재성(2013). 정치이념의 방향, 강도 및 층위. 한국정당학회보, 12(1), 61-86.
- 박종민, 김왕식(2006).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회보, 40(2), 149-169.
- 박종민, 배정현(2011). 정부신뢰의 원인: 정책결과, 과정 및 산출. 정부학연구, 17(2), 117-142.
- 서복경, 황아란(2012).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중심의 평가: 고령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5(1), 5-34.
- 안상훈(2000). 복지정치의 사회적 균열구조에 관한 연구: 계급론의 한계와 새로운 분석틀. 한국사회복지학, 43, 193-221.
- _____(2009).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정책학회, 16(1), 163-192.
- 안치민(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고려사회학논집, 9(1), 211-227.
- 이갑윤(2011). 한국인의 투표 행태. 서울: 후마니타스.
- 이갑윤, 이지호, 김세걸(2013). 재산이 계급의식과 투표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치연구, 22(2), 1-25.
- 이내영(2009). 한국 유권자의 이념성향의 변화와 이념투표. 평화연구, 17(2), 42-72.
- 이성균(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국가의 복지책임지지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2), 205-228.
- 이중섭(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4), 73-99.
- 이현우(2013). 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정부의 질, 한국과 북유럽국가 비교. 한국정치연구, 22(3), 96-119.
- 이현출(2005). 한국 국민의 이념성향: 특징과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9(2), 321-343.
- 주은선·백정미(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3-225.
- 최상욱(2012). 정부의 질 연구: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부역량 개념의 탐색적 고찰. 정부학연구, 18(2), 77-97.
- 황아란·이지호(2015). 복지부문 정부역할 확대 여부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31(2), 177-210.

- Alt, J. (1979). *The politics of economic decline: Economic management and political behaviour in Britain since 196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dress, H. & Heien, T. (2001). Four worlds of welfare state attitudes? A comparison of Germany,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 337-56.
- Bean, C. & Papadakis, E. (1998). A comparison of mass attitudes towards the welfare state in different institutional regimes, 1985-1990.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 211-236.
- Blekesaune, M. (2007). Economic conditions and public attitudes to welfare polic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3), 393-403.
- Blekesaune, M. & Quadagno, J. (2003).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tate policies: A comparative analysis of 24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9, 415-427.
- Borre, O. & Goldsmith, M. (1995). The scope of government. In O. Borre & E. Scarbrough(eds). *The scope of gover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Charron, N., Dijkstra, L. & Lapuente, V. (2015). Mapping the regional divide in Europe: A measure for assessing quality of government in 206 European region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2(2), 315-46.
- Durr, R. (1993). What moves policy senti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1), 158-170.
- Edlund, J. (1999). Trust in government and welfare regimes: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nd financial cheating in the USA and Norwa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5(2), 341-370.
- Esping-Anderso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 Hansenfeld, Y. & Rafferty, J.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 1027-1048.
- Holmberg, S. & Rothstein, B. (2014). *Good government: The relevance of political science*. Northampton, MA: Edward Elgar.
- Korpi, W. (1989). Power, politics and state autonomy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itizenship: Social rights during sickness in 18 OECD countries since 193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2), 309-328.
- Kumlin, S. (2002). Institutions-experiences-preferences: How welfare state design affects political trust and ideology. In B. Rothstein & S. Steinmo(eds). *Restructuring the welfare state: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Papadakis, E. (1993). Class interests, class politics and welfare state regim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2), 249-270.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hstein, B., Marcus S. & Teorell, J. (2011). Explaining the welfare state: Power resources vs. the quality of government. *Europ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1), 1-28.

- Rothstein, B. & Teorell, J. (2008). What is quality of government? A theory of impartial government institutions.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21(2), 165-190.
- Steinmo, S. (1994). Rethinking American exceptionalism: Culture or institutions? In L. Dodd & C. Jillson(eds). *The dynamics of American politics*. Boulder: Westview Press.
- Scott, J., Matland, R., Michelbach, P. & Bornstein, B. (2001). Just deserts: An experimental study of distributive justice norm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4), 749-767.
- Svallfors, S.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countries. *European Sociology Review*, 13, 283-304.
- _____ (1999). The middle class and welfare state retrenchment: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es. In S. Svallfors & P. Taylor-Gooby(eds). *The end of welfare state?* London: Routledge.
- _____ (2002). Political trust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Unpacking a supposed relationship. In B. Rothstein & S. Steinmo(eds). *Restructuring the welfare state: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Wilensky, H. (1975).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Structural and ideological roots of public expenditures*.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pending in Korea: Focusing on Welfare Perceptions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Lee, Jiho* · Hwang, Ah Ran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pending in relation with the perception of welfare level.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the SSK Good Government Research Unit' are used to perform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welfare attitudes and government perceptions, political orientation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The most prominent finding is that th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differ markedly between the two different groups of welfare perception. The empirical results say that persons living in a corrupt government tend to prefer welfare spendings despite having low level of welfare, and persons living in a unjust government tend to prefer welfare expansion because welfare level must be low. Persons living in a government of great capacity tend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 welfare spending despite having a high level of welfare, whereas persons living in a government of less capacity tend to have negative attitudes to welfare expansion because the level of welfare is too high beyond government capacity. This distinction between the two perceptions of welfare level provides a systemic understanding of public attitudes toward welfare spending.

Key Words: welfare attitude, welfare perception, quality of government, corruption, government capacity.

◆ 2016.01.30. 접수 / 2016.03.16. 1차 수정 / 2016.03.21. 게재확정

* Research Fellow, Sogang University(jiholeeb@sogang.ac.kr).

** Professor, Pusan University(ahwang@pusan.ac.kr).

〈부록 1〉 주요 변수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태도

구분	변수	변수 유목	사례수	복지확대 찬성비율(%)	통계량
복지 인식	전반적인 복지 수준	1=매우 낮다	46	87.0	$\chi^2=163.23,$ $p<.001$
		2=낮은 편	770	80.4	
		3=높은 편	664	53.9	
		4=매우 높다	52	25.0	
	적절한 복지전달 수준	1=전혀 그렇지 않다	130	66.2	$\chi^2=11.93,$ $p<.01$
		2=그렇지 않은 편	839	70.4	
		3=그런 편	514	64.0	
		4=매우 그렇다	28	46.4	
경제 인식	국가경제	1=매우 나쁘다	228	71.9	$\chi^2=3.78,$ $p=.29$
		2=나쁜 편이다	1076	66.0	
		3=좋은 편이다	200	70.0	
		4=매우 좋다	7	71.4	
	개인경제	1=매우 나쁘다	120	73.3	$\chi^2=5.01,$ $p=.17$
		2=나쁜 편이다	996	67.3	
		3=좋은 편이다	391	65.5	
		4=매우 좋다	5	100.0	
정부 인식	과제 해결 능력	0=없다	897	66.9	$\chi^2=0.70,$ $p=.71$
		1=있다	594	67.9	
	국가기관 청렴성*	부패	702	2.78(0.73)	$F=1.11,$ $p=.34$
		보통	422	2.79(0.72)	
		청렴	342	2.72(0.71)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함	1=매우 동의한다	547	72.0	$\chi^2=11.88,$ $p<.01$
		2=동의하는 편	700	66.6	
		3=동의하지 않는 편	236	60.6	
		4=전혀 동의 않는다	28	57.1	
	정치 성향	이념 성향*	진보	358	2.85(0.73)
중도			643	2.83(0.72)	
보수			496	2.63(0.71)	
정당 선호		새누리당	729	60.6	$\chi^2=32.55,$ $p<.001$
		새정치민주연합	465	73.1	
		정의당	48	85.4	
		기타정당	236	72.0	
국정 만족도*		불만족	493	2.93(0.76)	$F=23.95,$ $p<.001$
		보통	420	2.76(0.68)	
		만족	584	2.63(0.69)	

구분	변수	변수 유목	사례수	복지확대 찬성비율(%)	통계량
인구학적 변수	성별	0=여자	762	68.1	$\chi^2=0.36,$ $p=.55$
		1=남자	750	66.7	
	연령	20대	267	74.9	$\chi^2=22.02,$ $p<.001$
		30대	277	70.0	
		40대	323	71.2	
		50대	299	63.9	
		60대 이상	346	59.2	
	최종 학력	1=중학교	256	54.3	$\chi^2=30.17,$ $p<.001$
		2=고등학교	653	68.6	
		3=전문대	195	74.9	
		4=4년제 대학	359	70.2	
		5=대학원	40	65.0	
	도시 규모	3=대도시	690	70.4	$\chi^2=18.32,$ $p<.001$
		2=중소도시	557	68.9	
		1=농촌	263	56.3	
계층 변수	주관적 계층	1=상	50	72.0	$\chi^2=4.18,$ $p=.24$
		2=중	588	68.4	
		3=하	869	66.7	
	가구 자산	1=1천만원 미만	140	72.9	$\chi^2=13.81,$ $p=.18$
		2=1천만원~4천만원미만	136	74.3	
		3=4천만원~7천만원미만	122	68.9	
		4=7천만원~1억원 미만	155	60.6	
		5=1억원~1억5천만원 미만	218	66.1	
		6=1억5천만원~2억원 미만	155	71.6	
		7=2억원~3억원 미만	255	65.5	
		8=3억원~4억원 미만	158	69.0	
		9=4억원~6억원 미만	61	57.4	
		10=6억원 이상	94	64.9	

* 0에서 10점까지의 연속변수를 3점척도를 변환하였고(청렴성 지표는 4.5에서 5.5를 보통, 이념과 국정 만족도는 5점을 각각 중도와 보통으로 하였음), 복지확대 태도에 대한 수치는 복지확대 태도의 4점척도에 대한 평균 점수임(괄호 안 수치는 표준편차).

자료: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15년 정치인식조사.

〈부록 2〉 주요 변수에 따른 복지수준 인식

구분	변수	변수 유목	사례수	복지수준 낮다(%)	통계량	
경제 인식	국가경제	매우 나쁘다	228	63.9	$\chi^2=61.5,$ $p<.001$	
		나쁜 편이다	1076	54.8		
		좋은 편이다	200	31.8		
		매우 좋다	7	57.1		
	개인경제	매우 나쁘다	120	64.2	$\chi^2=55.71,$ $p<.001$	
		나쁜 편이다	996	58.9		
		좋은 편이다	391	38.1		
		매우 좋다	5	80.0		
정부 인식	과제 해결 능력	없다	897	59.4	$\chi^2=51.98,$ $p<.001$	
		있다	594	39.3		
	국가기관 청렴성*	부패	702	2.35(0.61)	$F=30.12,$ $p<.001$	
		보통	422	2.50(0.60)		
		청렴	342	2.65(0.61)		
	법집행이 공정하지 못함	매우 동의한다	547	64.1	$\chi^2=37.01,$ $p<.001$	
		동의하는 편	700	48.7		
		동의하지 않는 편	236	48.3		
		전혀 동의 않는다	28	35.7		
	정치 성향	이념 성향*	진보	358	2.31(0.57)	$F=23.09,$ $p<.001$
			중도	643	2.42(0.63)	
			보수	496	2.63(0.60)	
정당 선호		새누리당	729	43.3	$\chi^2=70.70,$ $p<.001$	
		새정치민주연합	465	61.7		
		정의당	48	79.2		
		기타정당	236	64.4		
국정 만족도*		불만족	493	2.24(0.58)	$F=71.353,$ $p<.001$	
		보통	420	2.44(0.58)		
		만족	584	2.67(0.60)		
인구학적 변수		성별	여자	762	54.5	$\chi^2=0.19,$ $p=.66$
			남자	750	53.4	
	연령	20대	267	64.4	$\chi^2=74.45,$ $p<.001$	
		30대	277	65.0		
		40대	323	57.8		
		50대	299	51.5		
		60대 이상	346	35.7		
	최종 학력	중학교	256	35.2	$\chi^2=60.35,$	

구분	변수	변수 유목	사례수	복지수준 낮다(%)	통계량
		고등학교	653	56.3	p<.001
		전문대	195	66.2	
		4년제 대학	359	57.9	
		대학원	40	45.0	
	도시 규모	대도시	690	57.0	$\chi^2=32.02$, p<.001
		중소도시	557	57.8	
농촌		263	38.3		
계층 변수	주관적 계층	상	50	44.0	$\chi^2=3.80$, p=.28
		중	588	53.4	
		하	869	55.0	
	가구 자산	1천만원 미만	140	55.0	$\chi^2=31.87$, p<.001
		1천만원~4천만원미만	136	58.8	
		4천만원~7천만원미만	122	59.0	
		7천만원~1억원 미만	155	46.5	
		1억원~1억5천만원 미만	218	54.6	
		1억5천만원~2억원 미만	155	57.4	
		2억원~3억원 미만	255	58.4	
		3억원~4억원 미만	158	54.1	
		4억원~6억원 미만	61	54.1	
		6억원 이상	94	29.8	

* 0에서 10점까지의 연속변수를 3점척도를 변환하였고(청렴성 지표는 4.5에서 5.5를 보통, 이념과 국정 만족도는 5점을 각각 중도와 보통으로 하였음), 복지확대 태도에 대한 수치는 복지확대 태도의 4점척도에 대한 평균 점수임(팔호 안 수치는 표준편차).

자료: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2015년 정치인식조사.